‘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피의자 되다

검찰, 11일 소환 조사
수사 개시 7개월만에 통보
재판 개입 등 전방위 의혹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7개월 여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최고 책임자로서 지시하고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에 취임해 2017년 9월에 퇴임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에 관해 전방위 조사를 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각종 의혹에 관해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한 바 없고 법관에 불이익 준적 없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데 양 전 대법원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주도 하에 이뤄진 정황도 다수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5년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당시 일본기업 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김앤장 관계자와 수차례 직접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또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 측과 소송 관련 의견서 논의를 하는데 앞서 보고를 받고 ‘임기 내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사법행정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한 의혹에도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들의 비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 법원 조직의 위신을 부당하게 지키려한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등 법원행정처에서 이뤄진 각종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직 대법관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이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보강 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뉴시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본관 등 대체부지 인근에서 찾을 수 없어”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4일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전 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집무실을 현 단계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청장은 “청와대 개방은 대통령께서 ‘광화문 대통령’을 하겠다는 뜻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것과 청와대 개방 2가지가 기본 기조였다”며 “그 중 청와대 개방은 경복궁-청와대-북악산 연결시켜서 ‘청와대의 광화문’이 아니라, 광화문을 청와대 안으로 끌어들이는 확장하는 개념으로 추진해서 북악산 정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 관저 앞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며 이 문제를 관저 이전까지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동선을 경호처와 함께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靑 상납 특활비는 뇌물’ 첫 판단… 박근혜 재판 영향 가능성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금액 가운데 일부가 뇌물로 인정되면서 향후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이 국정원 상납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3) 전 청와대 비서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정호성(50)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억원을, 이재만(53) 전 비서관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이후인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먼저 자진해서 건넨 특활비 2억원은 단순 국고 손실이 아닌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2억원에 대해 “비록 대통령이 자금 출처가 국정원 특별사업비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국정원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된 것인 이상 뇌물죄에서 말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동영 “신재민 철저 보호돼야”

“필요하면 국조 실시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4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필요하다면 국채발행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공익 제보자, 내부 고발자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의 내부 고발로 새해 연초부터 정국이 뜨겁다”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부당한 업무 지시는 반복되고 있고, 정권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여야 한다’는 신 전 사무관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명 ‘미네르바 사건’이 떠오른다”며 “이명박 정권 초기 30대 무명 청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쪽집게로 경제를 전망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패를 조목조목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정보통신법 위반을 걸어 미네르바 청년을 구속해서 입에 재갈을 물렸다”며 “그러나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회가 썩지 않기 위해서, 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고발 조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 요구와 함께 공익 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의 국채발행 조작의혹 진상조사단을 당내에 꾸려서 법률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경제를 강조했다. 경제 성장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도 “성찰과 진단, 구체적 실행 계획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인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평화당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먹고 사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약한 경제 주체를 강한 주체로 바꾸는 정치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한국당 “KBS 수신료 강제 징수 거부”

나경원 “편향된 시각 보여줘”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KBS가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수신료 징수 거부, 관련법 개정, 모니터링 활동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위-‘KBS의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영방송 KBS가 오늘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대한민국 헌법이 이대로 지켜질 것인가”라며 “북한의 만행인 천안함 폭침 사과를 받지 않고 이해하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안보관도 충격적이지만 엊그제 KBS 방송을 탔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의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편파성 시비가 계속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KBS 공영노조마저도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라며 “언론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생명과 같다.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왜곡, 편향된 시각을 보여주는 KBS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한국당이 KBS의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 징수 특위를 발족하게 된 것은 결국 국민이 외면하는 KBS를 국민이 보는 KBS로 바꾸겠다는 일념”이라며 “홈페이지에 국민 모니터 팀을 운영해서 편향 보도나 방송에 대한 접수를 받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은 언론 장악 정책을 저지하고 장악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특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강력히 정책 저항운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KBS 수신료 거부와 관련해서는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관련법 개정을 관철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